

신구조문대비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16호, 2015.3.11., 타법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67호, 2016.5.29., 일부개정]
<p>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으려는 대학생 또는 대학생의 부모가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1. ~ 3. (생략)</p> <p>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p> <p>5. (생략)</p>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신설></p> <p><신설></p> <p>③ (생략)</p> <p>④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2항에 따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p>	<p>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 - - - - - - - - -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 - - - - - - - - - - .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 - - - - - - - - - -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p> <p>5. (현행과 같음)</p> <p>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p> <p>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을 포함한다)</p> <p>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 - - - 학자금대출 - - - - - - - - - - - - - - - .</p> <p>⑤ - - - - - - - - - -</p>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16호, 2015.3.11., 타법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67호, 2016.5.29., 일부개정]
2010.12.27] [제50조의2에서 이동] <div><신 설></div> <div><신 설></div> <div><신 설></div>	<div>— — — —. <후단 삭제></div> <div>⑥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div> <div>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황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div> <div>⑧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50조의2에서 이동]</div>
제56조(과태료) ①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div><신 설></div> <div><신 설></div> <div>② (생 략)</div>	<div>— — — —. — — —.</div> <div>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div> <div>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div> <div>② (현행과 같음)</div>

신구조문대비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13337호, 2015.6.22., 일부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14159호, 2016.5.29., 일부개정]
<p>제39조(이중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사업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중 지원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생 및 대학생의 부모가 다른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u>공익법인</u>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u>비영리재단법인</u></p> <p>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p> <p>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p> <p><신설> <신설></p> <p>③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교육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p> <p>④ (생략)</p> <p>⑤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 — —.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범위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 <u>공익법인</u>으로서 — — — — — <u>비영리재단법인</u>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p> <p>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p> <p>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p> <p>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p> <p>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p> <p>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p>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13337호, 2015.6.22., 일부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14159호, 2016.5.29., 일부개정]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p> <p>⑥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 지급을 받은 대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p> <p>⑦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과 제출 의무의 면제, 제6항에 따른 초과금액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16.5.29]</p>
<p>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신 설></p> <p>② ③ (생략)</p>	<p>제44조(과태료) ① - - - - -</p> <p>- - - - -</p> <p>-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p> <p>② ③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41호, 2016.7.19., 타법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59호, 2016.8.29., 일부개정]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생 략)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u>100억원</u> 이상인 법인일 것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 1. (현행과 같음) 2. - 10억원 - - - - -
<u><신 설></u>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우 3.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제출 또는 등록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②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으려는 기관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8.29]
<u><신 설></u>	제35조의5(공익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의5제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41호, 2016.7.19., 타법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59호, 2016.8.29., 일부개정]
	<p>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p> <p>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8.29]</p>
<p><신 설></p>	<p>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①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p> <p>1.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과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p> <p>2. 법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③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반환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p> <p>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p>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41호, 2016.7.19., 타법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59호, 2016.8.29., 일부개정]
<p><신 설></p>	<p>1.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를 반환의무자가 반환 금액만큼 변제한 것으로 처리. 이 경우 그 변제의 총당은 「민법」 제477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2.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순서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무상 지원하는 학자금의 재원이 되는 계정 또는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본조신설 2016.8.29]</p> <p>제5장 벌칙</p> <p>제3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별표] <신설 2016. 8. 29.>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나. 법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신구조문대비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타법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58호, 2016.8.29., 일부개정]
<p>제44조(이중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자료</u></p>	<p>제44조(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 - - - - - - - -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 - - - - - - - - - - <u>자료[제목개정 2016.8.29]</u></p>
<p><신설></p>	<p>제44조의2(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1. 법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p> <p>2.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우</p> <p>3.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4.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제출 또는 등록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p> <p>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기관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8.29]</p>
<p><신설></p>	<p>제44조의3(공익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p>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타법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58호, 2016.8.29., 일부개정]
	<p>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p> <p>② 법 제3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8.29]</p>
<p><신 설></p>	<p>제44조의4(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①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p> <p>1. 법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과 학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 금액의 합계액</p> <p>2. 법 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③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반환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④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p> <p>⑤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p> <p>1.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p>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타법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58호, 2016.8.29., 일부개정]
	<p>및 그에 수반한 채무를 반환의무자가 반환 금액만큼 변제한 것으로 처리. 이 경우 그 변제의 충당은 「민법」 제477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2.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순서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무상 지원하는 학자금의 재원이 되는 계정 또는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본조신설 2016.8.29]</p>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원천공제 의무자가 법 제24조제2항, 제25조(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26조(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호	과소·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채무자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2호	과소·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라.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3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마. 채무자가 법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	5만원	20만원	50만원

비고

1. 교육부장관은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부과할 과태료를 계산할 때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2. 교육부장관은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부과할 과태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3.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은 각각 500만원으로 한다.